

### “공정위, 낙농업 특성 고려 우유시장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국회 및 낙농가들이 낙농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회는 전국 낙농가 45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우유시장 불공정조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낙농가들은 “우유는 매일 목장에서 생산되고 보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품으로 생산 즉시 판매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생산기반이 한번 붕괴되면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낙농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낙농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경영구조가 취약한 유가공업체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낙농가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낙농가들은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낙농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며 향후 낙농정책 방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선량한 농민이 피해를 보는 안되고 일방적으로 농민들의 희생과 감내를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식품부 업무현황보고회에서 농업특성을 고려해 낙농가들의 피해가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시장조사가 이뤄지도록 농식품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유가격은 담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도한 가격인데 농림수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가격담합조사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유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생산농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으니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 대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목장마다 축분 산적해 낙농 못할 지경”



충남 부여지역 낙농가들이 우분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일 배설되는 젖소의 분이 목장마다 산적해지면서 “낙농업을 못해 먹겠다”는 볼멘소리가 점점 절박해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축분처리 애로 타개에 나선 축산단체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문서주하며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모색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눈치다.

지난 23일 기자가 찾았던 두리목장(대표 이기석·48·충남 부여군 귀암면 부여두리 소재).

착유우 60여 두를 비롯해 총 70여 두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는 두리목장은 HACCP 인증을 취득한 목장으로 외관상으로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2640㎡(800여 평)규모의 축사에는 질척한 축산분뇨가 가득 차 있었고 축사 옆에 자리잡고 있는 축분 저장고 역시 사정이 비슷했다.

“당장 치워야할 축사 내 축분이 5톤 적재 차량으로 200여 대 분은 족히 될 겁니다. 위생적으로나, 동물복지 차원에서 바로 바로 치워야하는데…”라고 말끝을 흐린 이기석 씨는 “축분처리만 생각만 하면 머리부터 무거워지고 답답해진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저희 목장 사정만 이런 게 아니고 이웃 목장들 사정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숨들이 날로 깊어지고 걱정이 태산 같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대책마련과 지원을 간절히 호소했다.

이 씨는 현재 낙농가들이 매일 쌓이는 가축분뇨를 처

리하기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가축분뇨 처리가 난제로 대두한 까닭은 부여군 관내를 통과하는 백마강 둔치의 시설원예농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거의 폐농되면서 축분의 대량 수요처가 사라진 데서 비롯됐다.

부여군 관내 백마강변의 둔치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수박, 매론 주산지였다. 이런 둔치에서 원예농업을 영위했던 경종농가들이 축분을 비료로 활용했으나 현재 많은 농가가 폐농한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는 농가들도 축분보다는 일반퇴비를 선호, 축분퇴비 수요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두리목장과 이웃한 한 목장 주는 “일종의 축산 병목현상이라고 봅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먹었으면 배설해야 하고 배설한 만큼 치우고 처리하는 게 정상적인 이치인데 현재 출구가 좁아지고 막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축분을 5톤 화물트럭 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에 목장에서 사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처치가 곤란한 형편이 돼버렸다”고 격세지감을 푸념처럼 털어놨다.

한편 부여지역 낙농가들의 구심체인 백제낙협(조합장 정중호)은 부여지역 착유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는 2791여두로 이들 젖소들이 배설하는 축분은 하루 7만 3871kg, 연간 2만6963톤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또 부여군 관내 지역농협들이 축분 대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를 구매하는 양은 연간 38만3600여 포(매출액 13억7000만원, 정부 보조금 4억4498만원포함)에 달해 자연순환농업운동이 지역 및 품목축협과 단위농협들간에 연계 추진될 경우 낙농가들의 축분처리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중호 백제낙협 조합장은 “현재 부여군 관내에 돼지 분뇨를 액비로 가공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 시설에 대가축 분을 퇴비화하는 시설을 보완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축산과 자연순환농업정책 및 관련 시책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육우고기 군납단가 인상 조정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부장 이기수)는 방위사업청과의 협의를 거쳐 '10년도 육우고기 군납단가를 5.9% 인상(1만9332원/kg → 2만472원/kg) 조정해 6월 14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군납단가 인상 조정으로 금년도 육우고기 잔여물량 84톤의 납품총액이 162억원에서 172억원으로 약 10억원 정도 늘어나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군납사업소 납품여건 개선과 육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농협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시중가격의 등락을 군납단가에 적기 반영해 국내산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안정적인 물량확보로 군 급식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군납 축산물의 단가조정 대상은 시중시세를 적용하는 품목에 한정되고 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되고 계약시점 대비 최근시점 6개월 또는 1년의 평균시세가 ±3% 이상 등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군납단가를 조정해 오고 있다.

## 상설 체험관 통해 '친근한 낙농' 알린다

구제역으로 인해 상반기에 취소됐던 도심속 목장나들이를 대신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상설낙농체험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21일 자조금사무국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자조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중 구제역으로 인해 취소됐던 도심속 목장나들이 예산을 활용해 경기 과천시소재 국립과학관에서 '2010 우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10 우유 아카데미'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말부터 8월말까지 30일간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상설낙농체험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국립과학관은 학생들의 방

문이 매우 많은 곳으로 별도의 홍보 없이도 많은 체험객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성 우수농가 선발 및 생산비 절감 경연대회를 비롯해 연구용역 사업도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생산성 우수농가 선발 및 생산비 절감 경연대회는 낙농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2차 서류심사를 거쳐 3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농가를 선발해 사례발표회 및 사례집을 발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산비 절감 경연대회는 생산성 우수농가를 선발해 역시 사례발표 및 사례집을 발간, 보급키로 했다.

### “젖소농가 특수성 반영”... 도내 살처분 농가 입식비용 10% 보조

경기도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중앙정부의 살처분 보상금과는 별도로 가축입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내 구제역 살처분 농가들의 가축입식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살처분 농가들의 가축입식비용에 대한 부담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가 이번에 지원하는 방식은 입식가축의 10%에 해당하는 가축입식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젖소농가가 100마리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 이중 10마리에 대한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젖소 초임만삭우를 기준으로 두당 300만원 선에서 지원된다. 또 한우농가의 경우 송아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220만원 선이다.

돼지의 경우 자돈구입비용을 지원해야 하지만 자돈구입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신 후보모돈구입비용이 젖소와 한우와 마찬가지로 10% 선에서 지원된다. 다만 이번 지원대상에서 발생농장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방역담당 임병규 사무관은 “이번 구제역 사태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농가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과거와 달리 이번 구제역은 젖소농장에서 많이 발생해 젖소 농가들의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이 같은 지원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북과 충남, 인천 등의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젖소 산지가격 조사대상 확대

농협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기준 문제와 관련해 빚어진 젖소 산지가격 조사방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지역을 기존 16개 지역에서 20개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역내 3개 대상처를 조사하던 것을 5개소 이상으로 늘리기로 해 조사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는 지난 17일 젖소 산지가격 조사지역에 경기도 안성, 이천, 포천지역과 충청남도 아산 지역을 포함하고, 조사대상처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농협이 조사, 발표하고 있는 젖소산지가격이 기존 48개소의 표본에서 최소 100개소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게 돼 더욱 정확해진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또한 농협은 정기적인 시세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2산, 3산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통해 경산우 거래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재민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계장은 “더욱 내실 있는 조사를 추진하고 지역 조사원 교육과 지도점검도 강화할 것”이라며 “젖소 산지가격조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타 축종에 비해 조사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만큼 젖소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농업 개방 ‘어른몰이’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한국국제통상학회·한국농업경제학회·한국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농업의 세

계획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식품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제개발협력의 과제와 사례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에 대해,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새로운 농정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농업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이번 워크숍이 농업부문 시장개방에 대응키 위함이라기보다, 시장개방을 위한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또 일부를 제외하고 시장개방의 핵심 당사자인 농민단체 참여가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워크숍이 끝나갈 무렵 한 참석자는 "오늘 워크숍을 지켜보면서 이제 농민들도 개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 농업을 세계화 하자는 쪽으로 생각이 모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워크숍 분위기가 농업부문 시장개방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한 쪽 방향으로 쏠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이번 워크숍 개최 소식을 접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한농연은 지난 5월 28일 '한·중 FTA 추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농업통상협상 때문에 발생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면서 "농업인(단체)와의 진솔하고도 책임 있는 대화와 건설적 대안 모색 대신, 학자들을 선두에 내세워 일방적 여론몰이에 몰두함으로써 성년 농심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또 "정부가 이제라도 관료주도·행정편의적인 농업 개방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 온 섬김의 자세로 돌아가, 농업인(단체)과의 소통과 건설적 정책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낙농제도…차라리 현행체제 유지”

전국낙농조합장협의회(회장 박철용·부산우유조합장)는 지난 10일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방향은 2005년 최초의 정부시안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동안 건의해온 전국 단위 단일쿼터제 도입에 따른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 제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조합장은 정부가 건의한 의견을 반영시키지 않으면서 실무협의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정부안대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 보다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조합장들은 특히 중앙낙농기구의 경우 현행 낙농진흥회 체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생산자와 수요자 동수로 구성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낙농조합을 계획생산과 수급조절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비롯해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인수도시 회수된 쿼터 등을 유보시켜 쿼터뱅크를 만들어 신규 낙농인에게 임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축산후계인력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무상지원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매입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실무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신관우 충북낙협장과 장중수 천안공주낙협장, 이경용 당진낙협장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이들 조합장들은 낙농육우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자들의 의견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출처 : 축산신문, 농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